

행정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②③	④	④	④	③
6	7	8	9	10
②	①	①	①	③
11	12	13	14	15
①	①	①	②	①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④	③
21	22	23	24	25
②	③	①	④	①

- ②③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 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헌재 2000.6.1. 97헌바74).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 ④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1.17. 2006두10931).
-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9.6. 2007도4197).

- ③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동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2.12.28. 82누1).
- ②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2008.5.15. 2007두26001).
-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2도10269).
-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 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5.4.28. 2004두8828).

9. ①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명확주의)는 것이다(대결 1994.9.30. 94부18).

10. ③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재량준칙 그 자체의 법규성이 직접적으로 있진 않지만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간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11.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대판 2015.2.12. 2013두987).

12. ①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대판 2010.7.15. 2009두19069).

13. ①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6.26. 96누12030).

14. ②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7.27. 2006두8464).

15.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6. ②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고 국가배상법상으로는 배상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17. ③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1.24. 94다45302).

18. 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 ④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개정결정을 한 경우 위 개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개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개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1.9.13. 91누391).

20. ③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6.11. 95누12460).

21. ②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 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 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11.29. 2016두38792).

22. ③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2006.2.10. 2003두5686).

23. ①

자동차운수사업 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판 1996.10.11. 96누61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4. ④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으로서, 이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대판 2004.9.24. 2002다68713).

25.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행정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③	①	②	④
6	7	8	9	10
③	④	②	④	②
11	12	13	14	15
③	①	③	②	①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②	②
21	22	23	24	25
①	③	②	①	②

- ③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
ㄴ. 예산안편성지침의 시달(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중앙관서로 시달)
ㄷ. 예산요구서의 제출(5월 31일까지,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
ㄹ.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 및 협의
ㅁ. 정부예산안의 확정(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 ③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판단 기준이었다.

선지분석

- ④ 서울시 OPEN(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시스템은 과정 투명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리 투명성의 차원

- (1) 과정 투명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으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서울시 OPEN(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시스템을 말한다.
- (2) 결과 투명성
집행과정을 통한 결과의 투명성으로서 결정된 의사결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청렴계약제'나 '시민옴부즈만제도' 등이 있다.

(3) 조직 투명성

조직 자체의 개방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된 규정·정책·고시·입찰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공시제도(publicity)의 도입은 대표적인 예로서 조직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 ①
보기의 사례는 '선의의 거짓말'과 같은 백색부패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백색부패는 모든 국민이 용인하는 부패로서 사회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 ②
옴부즈만제도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사법부에 의한 통제나 다른 구제수단에 비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 또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 ④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 등과 같은 초합리성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 ③
정책결정상의 가치중립성의 확대가 아니라 가치지향성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국가의 성립으로 인해서 행정권의 강화나 확대뿐만 아니라 재량범위가 확대되고 정책과정이 동태화되었다.
- ④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의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선지분석

- ① 지방교부세재원(내국세의 일정비율)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 모두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
- ② 보통교부세는 비도(費途)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며 재정력지수가 1이 넘는 경우(서울시 자치구, 수원시, 성남시 등)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
- ③ 지방교부세에 수직적 조정기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정기능은 미흡하다.

8.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9. ④

설문의 내용은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 방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Build · Transfer · Operate - adjusted)방식이다.

정리 BTO-rs와 BTO-a 방식

- (1)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Build · Transfer · Operate - 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다. 민간이 사업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부담하는 BTL로 단순화되어 있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손실과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BTO 방식보다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 위험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식이다. 최근 포스코 건설로 민자유치가 결정된 “신안산선”에 이 방식이 적용되었다.
- (2)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Build · Transfer · Operate - adjusted)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까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 재정이 지원된다.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표적으로 서울경전철 사업,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10. ②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효율성의 가치를 달성하려는 노력보다는 공정성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11. ③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한 것은 계급제의 특징이다.

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제3항).

13. ③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표준화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진다.

14. ②

징계의 수단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강임과 강등을 잘 구별해야 한다.

15. ①

과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한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다.

16. ①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는 중징계로, 견책·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경징계로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비교

구분	직위해제	직권면직
개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신분박탈)하는 인사처분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한 자 징계의결중인 자(중징계에 한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능력부족 및 성적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그 향상이 기대될 수 없을 때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 감소로 인한 감원 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 등 징병검사·입영 등의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해당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17. ④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한 것은 영기준예산제도(ZBB)의 장점이다.

정리 품목별예산제도(LIBS)의 장점

- (1) 회계책임 확보와 예산통제 용이
예산과목의 최종단위인 목을 중심으로 예산액이 배분되기 때문에 회계책임의 확보와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2) 철저한 예산심의 및 예산남용 방지
공무원들의 재량을 줄여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3) 이익집단의 저항 회피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점을 갖는다.
- (4) 세부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하고 긴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해준다.

18. ④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장단(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19. ②

배분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개인이나 기업 지역 및 각 분야별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ㄷ.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ㄹ.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배분정책의 예이다.

선지분석

- ㄱ. 선거구의 신설 및 변경은 구성정책의 예이다.
- ㄴ.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확정은 구성정책의 예이다.
- ㄹ. 조세 부과 및 징병제도는 추출정책의 예이다.
- ㅂ.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는 상징정책의 예이다.

20. ②

베버(Weber)의 관료제는 관료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비정의성(impersonality)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여 공평무사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한다.

정리 근대 관료제[베버(Weber)]와 후기관료제[맥커디(McCurdy)]의 비교

근대 관료제	탈(후기)관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제(계서적 구조) • 업무의 법규기속성 • 비정의성(비개인성) 추구 • 전문화(기능 중심) • 영속성 • 비밀주의 • 고정적 권위와 공식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at 조직(구조화된 비계층제) • 상황에 적응하는 변증법적 조직 • 고객을 동료로 취급 • 팀 중심의 문제해결, 집단적 의사결정 • 일시적 편제, 직업의 이동성 • 개방적 의사전달 • 권위의 유동성(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자)

21. ①

제시문은 신우파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신우파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공공선택론적 시각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선지분석

- ② 계급정치론은 정부 간의 기능배분 문제를 지배계급들 간의 계급갈등으로 보는 시각이다.
- ③ 다원주의는 역사적으로 오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 ④ 엘리트론은 정치적 영향력이 대중에게 분산되어 있지 않고 일군의 응집력 있는 지배집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22. ③

잠재적 학습이론(latent learning theory)은 강화라는 인위적 조작이 없어도 학습(잠재적 학습)은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강화작용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정리 학습이론의 유형

- (1) 고전적 조건화이론(classical conditioning theory)
조건화된 자극의 제시에 의하여 조건화된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이론으로, 가장 오래된 학습이론이다[파블로프(Pavlov)의 개 실험].
- (2) 수단적 조건화이론(instrumental conditioning theory)
사람들은 강화요인(바람직한 결과)의 획득을 위해 행태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론이다[손다이크(Trondike)의 효과의 법칙].
- (3) 조작적 조건화이론(operational conditioning theory)
행동의 결과를 조건화함으로써 행태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스키너(Skinner)].
- (4) 잠재적 학습이론(latent learning theory)
강화라는 인위적 조작이 없어도 학습(잠재적 학습)은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강화작용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 (5) 인식론적 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며 왜 행동하는가라는 심리적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론으로, 관찰 가능한 행태나 외부의 자극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욕구, 만족, 기대 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동기부여의 형평성이론이나 기대이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6)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인간과 그의 행동 그리고 환경이 서로 교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이론이다.
- (7) 귀납적 학습이론(inductive learning theory)
직접적인 설명·지시가 없어도 불확실한 추론이라는 귀납적 학습을 통하여 어떤 특정 영역의 구조와 규칙을 학습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3. ②

보기의 내용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활용하는 재귀적 통제에 대한 설명이다.

선지분석

- ① 축조된 통제는 비슷한 대상끼리 둘씩 짝을 지은 다음 하나는 실험집단에, 하나는 통제집단에 배정함으로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 ③ 통계적 통제는 통계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외부변수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 ④ 잠재적 통제는 프로그램 집행자, 전문가, 참여자들의 평가로 실험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정리 사회실험(정책실험)의 설계방법

진실험설계		(1) 무작위 배정에 의한 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2) 통제집단사후측정설계, 통제집단사전사후측정설계 (3) 솔로몬식 4집단실험설계
준 실험 설계	축조된 통제	(1)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사전측정비교 집단설계): 짝짓기(매칭)로 구성 (2) 비동질적 통제집단사후측정설계: 정태적 집단비교방법 (3) 회귀불연속설계(자격기준에 의한 설계)
	재귀적 통제	(1)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2) 단절적 시계열비교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비실험설계		(1) 대표적 비실험: 정책실시전후비교방법, 사후적 비교집단선정방법(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2) 통계적 통제: 통계적 방법으로 외생변수(하위·혼란변수)를 추정·제거 (3) 포괄적 통제: 포괄적인 규범·목표를 통제 (4) 잠재적 통제: 잠재적 집단(전문가, 패널)의 판단과 비교, 통제

24. ①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거시적·하향적인 재정관리기법이다.

선지분석

- ②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관리제도는 미시적인 재정관리기법이다.
 - ③ 사회간접자본(SOC)의 민간투자유치도 미시적인 재정관리기법이다.
 - ④ 예산성과금제도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미시적인 재정관리기법이다.
- ⇒ 미시적인 재정관리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방식으로,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서 시작하여 아래에서부터 예산을 결정해 올라가는 상향적 기법을 의미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관리제도, 사회간접자본(SOC)의 민간투자유치, 예산성과금제도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미시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25. ②

전자정부서비스(“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체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전자정부법」 제9조의2).

선지분석

- ① 「전자정부법」 제7조의 규정이다.
- ③ 「전자정부법」 제10조의 규정이다.
- ④ 「전자정부법」 제16조의 규정이다.

정리 「전자정부법」

제7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 행정기관 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 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제9조의2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제10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경제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④	②	④	④
6	7	8	9	10
④	①	③	②	④
11	12	13	14	15
③	②	①	①	①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④	①
21	22	23	24	25
①	①	①	④	②

1. ③

출제포인트 미시-이윤극대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인 이윤은 $MR=MC$, 그리고 MR 기울기 $< MC$ 기울기일 때 극대화된다.

정답

- 3개를 생산할 때,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기에 재화 3개를 생산하면 이윤이 증가한다.
- 4개를 생산할 때,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적기에 재화 4개를 생산하면 이윤이 감소한다.
- 따라서 재화를 3개 생산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2. ④

출제포인트 거시-수출승수

수출승수는 $\frac{dY}{dX} = \frac{1}{1-c(1-t)-i+m}$ 이다.

정답

- 한계소비성향 $c = 0.8$, 비례세의 세율 $t = 0.25$, 한계 수입성향 $m = 0.1$, 유발투자계수 $i = 0.1$ 이므로 수출승수 $\frac{dY}{dX} = \frac{1}{1-c(1-t)-i+m}$

$$= \frac{1}{1-0.8(1-0.25)-0.1+0.1} = \frac{1}{0.4} = 2.5$$
이다.
- 따라서 수출 2단위가 외생적으로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5단위 증가한다.

3. ②

출제포인트 거시-IS곡선

IS곡선 이동폭은 독립지출변화분 \times 승수이다.

정답

- 한계소비성향이 c 일 때,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기에 정부지출승수는 $\frac{1}{1-c}$ 이고, 조세승수는 $\frac{-c}{1-c}$ 이다. 한계소비성향은 0.5이기에 정부지출승수=2, 조세승수=-1이다.
- 따라서 정부지출을 1,000만큼 늘리면, IS곡선은 2,000만큼 우측이동하고, 조세를 1,000만큼 늘리면 IS곡선은 1,000만큼 좌측이동하기에 결국, IS곡선은 1,000만큼 우측이동한다.
- 그런데 LM곡선은 우상향하기에 균형국민소득은 1,000보다 적게 증가한다.

4. ④

출제포인트 거시-본원통화와 통화량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지급준비금’, ‘통화량 = 현금통화 + 예금통화’이다.

정답

- 실제지급준비율=법정지급준비율(18%)+초과지급준비율(2%)=20%
- 실제지급준비율(20%)=[지급준비금(200만 원)/예금통화] $\times 100$ 에서 예금통화=1,000만 원이다.
- 현금통화비율(0.2)=(현금통화/통화량) $\times 100$ =[현금통화/(현금통화+예금통화) $\times 100$]에서 예금통화가 1,000만 원일 때, 현금통화는 250만 원이다.
- 통화량=현금통화(250만 원)+예금통화(1,000만 원)=1,250만 원이다.
- 본원통화=현금통화(250만 원)+지급준비금(200만 원)=450만 원이다.

5. ④

출제포인트 거시-경제성장요인

총생산함수 $Y = AN^{0.7}K^{0.3}$ 을 근사치로 변형하면, $(\frac{\Delta Y}{Y}) = (\frac{\Delta A}{A}) + 0.7(\frac{\Delta N}{N}) + 0.3(\frac{\Delta K}{K})$ 이다.

정답

- $(\frac{\Delta Y}{Y}) = 4\%$, $(\frac{\Delta N}{N}) = 3\%$, $(\frac{\Delta K}{K}) = 2\%$ 를 대입하면, $4\% = (\frac{\Delta A}{A}) + (0.7 \times 3\%) + (0.3 \times 2\%)$ 에서 $(\frac{\Delta A}{A}) = 1.3\%$ 이다.
- 따라서 경제성장률 4%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기여한 부분이 1.3%, 노동증가가 기여한 부분이 2.1%, 자본증가가 기여한 부분이 0.6%이다.
- 따라서 성장기여도는 노동 > 총요소생산성 > 자본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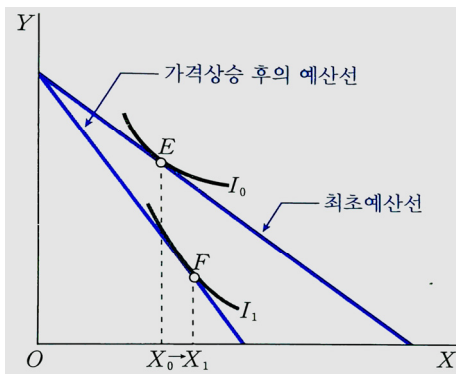
6. ④

출제포인트 미시-기펜재

기펜재는 수요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기펜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구입량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소비가능영역이 감소하기에 소비자의 효용 수준은 감소(가)한다.
- 기펜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구입량이 증가하기에, 소비자균형은 바뀐 예산선 상에서 E점보다 오른 쪽인 F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펜재인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Y재의 소비량은 반드시 감소(나)한다.



7. ①

출제포인트 국제-핵서-올린정리

핵서-올린정리에 의하면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한다.

정답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에서는 풍부한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희소한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풍부국에서는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자본풍부국에서는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8. ③

출제포인트 거시-이자율과 물가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

정답

예금의 실질 구매력은 실질 이자율로 평가할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실질 이자율은 각각 3%와 영(0)이므로 전년에 비해 예금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했다. 명목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크면 실질 이자율은 양(+)의 값을, 명목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작으면 실질 이자율은 음(-)의 값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 ① 실질 이자율은 2013년에는 양(+)의 값을 가지며, 2014년에는 영(0)이며, 2015에는 음(-)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과 마찬가지로 매년 하락하였다.
- ②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차이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값을 가지는데 2013년의 차이가 가장 작다.
- ④ 2015년의 물가 수준은 전년에 비해 2% 증가하였다.

9. ②

출제포인트 거시-투자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VMP_K)와 자본의 사용자비용 $[(r+d)P_K]$ 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적정자본량이 결정되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신고전학파이론이다.

정답

- 사용자 비용 $=(r+d)P_K$ 에 따라
-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 $=15-5=10$
- $(r+d)P_K$ 에서 $r=10\%$, $d=5\%$, $P_K=10,000$ 원으로
- 사용자 비용 $=(r+d)P_K=(0.1+0.05) \times 10,000$ 에서 $=1,500$

10. ④

출제포인트 거시-경제성장이론

요소대체가 가능한 1차동차 생산함수와 요소가격의 신축적 조정을 가정하는 Solow모형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설명하였다.

정답

Solow모형에서는 자본증가율($\frac{sf(k)}{k}$)과 인구증가율(n)이 동일할 때, $\frac{sf(k)}{k}=n$ 에서 자본과 노동이 모두 완전 고용되는 균형상태가 달성된다.

오답피하기

- ① 내생적 성장이론 모형은 다양한데 각 모형에서는 기술진보율이 내생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 ② Solow모형에서의 자본축적의 황금률이란 1인당 소비가 극대가 되는 균형상태를 말한다.
- ③ Solow모형에서는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기에 1인당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11. ③

출제포인트 국제-환율

금융시장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국가간 완전 자본이동이 보장될 때 국내투자수익률과 해외투자수익률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이자율 평가설로, 환율변화율=국내이자율-해외이자율이다.

정답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하면 달러공급의 증가로 환율이 ㉠하락하고,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이자율평가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율변화는 두 국가 간 ㉡이자율 차이만큼 나타난다.

12. ②

출제포인트 거시-GDP

“일정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국내총생산(GDP)이라 하고,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답

추가급등은 생산액증가와 관련없기에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재고증가분은 재고투자를 통한 투자증가로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포함된다.
- ③ 과거에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탈세규모의 축소로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포함된다.
- ④ 자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얻는 편익인 귀속임대료의 상승분은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포함된다.

13. ①

출제포인트 거시-AS곡선

노동시장의 균형은 $(VMP_L)MP_L \times P = W$ 이다.

정답

W 가 10이고, MP_L 은 생산함수 $Y=2\sqrt{L}$ 을 미분한 $MP_L = \frac{1}{\sqrt{L}}$ 이다. L 은 $MP_L \times P = W$ 에서 $\frac{1}{\sqrt{L}} \times P = 10$ 을 통해 $L = \frac{P^2}{100}$ 이다. 이를 생산함수 $Y=2\sqrt{L}$ 에 대입하면 $P=5Y$ 의 AS곡선을 구할 수 있다.

14. ①

출제포인트 미시-정보비대칭성

소비자들이 고품질 중고차를 최대 1,400만 원에, 저품질 중고차는 최대 800만 원에 구매할 의사가 있기에, 고품질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p 일 때, 구매자의 지불용의 금액은

$$[p \times 1,400] + [(1-p) \times 800] = 600p + 800 \text{이다.}$$

정답

- $p=0.2$ 일 때, 구매자의 지불용의 금액은 $600p + 800 = 920$ 만 원이다.
- 고품질 중고차 소유자들은 최소 1,000만 원을 받아야 판매할 의향이 있고, 저품질 중고차 소유자들은 최소 600만 원을 받아야 판매할 의향이 있기에, 저품질 중고차만 거래된다.
- $p=0.5$ 일 때, 구매자의 지불용의 금액은 $600p + 800 = 1,100$ 만 원이다.
- 고품질 중고차 소유자들은 최소 1,000만 원을 받아야 판매할 의향이 있고, 저품질 중고차 소유자들은 최소 600만 원을 받아야 판매할 의향이 있기에, 모든 품질 중고차가 거래된다.

15. ①

출제포인트 거시-디플레이션갭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디플레이션갭은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 증가시켜야 하는 유효수요의 크기로 측정된다. 즉, GDP갭=승수 \times 디플레이션갭이다.

정답

$Y=C+I+G$, 즉 $Y = (100 + 0.75Y) + 100$ 에서 균형국민소득은 800이기에 완전고용국민소득인 900과의 격차는 100이다. 따라서 $100 = \frac{1}{1-0.75} \times \text{디플레이션갭}$ 에서 디플레이션 갭은 25이다.

16. ①

출제포인트 미시-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

개별수요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도출되는 시장수요곡선과 개별공급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도출되는 시장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을 결정한다.

정답

- 개별수요함수가 $Q^D = 12 - 2P$ 이고 동일한 소비자가 10,000명이 있기에 시장수요함수는 $Q^D = 120,000 - 20,000P$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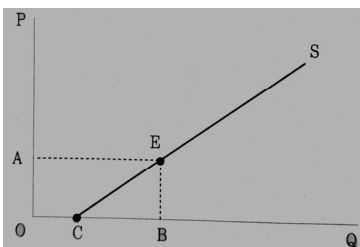
- 개별공급함수가 $Q^S = 20P$ 이고 이 상품의 공급자가 1,000명이기에 시장공급함수는 $Q^S = 20,000P$ 이다.
- 따라서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를 연립하면 $120,000 - 20,000P = 20,000P$, $40,000P = 120,000$ 에서 $P=3$ 이다.
- $P=3$ 을 수요함수 혹은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균형수급량은 $Q=60,000$ 이다.

17. ④

출제포인트 미시-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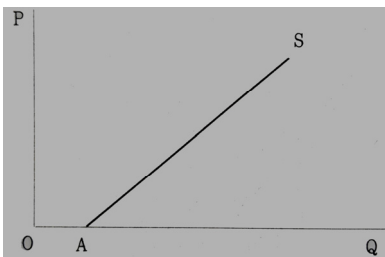
Y절편이 음(-)인 우상향의 공급직선에서 X절편으로 갈수록 탄력도는 영(0)에 가까워진다.

정답



공급곡선이 수량축을 통과하는 우상향의 직선인 경우 공급곡선상의 E점에서의 가격탄력성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eta &= \frac{dQ}{dP} \cdot \frac{P}{Q} \\ &= \text{공급곡선 기울기의 역수} \times \frac{P}{Q} \\ &= \frac{BC}{EB} \times \frac{EB}{OB} \\ &= \frac{BC}{OB} < 1\end{aligned}$$



A점에서는 $P=0$ 이기에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18. ②

출제포인트 미시-효용극대화

$\frac{MU_X}{P_X} < \frac{MU_Y}{P_Y}$ 이면,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작다. 그러므로 X재 구입을 줄이고 Y재 구입을 증가시켜 효용증대가 가능하다.

정답

$$1.5 = MRS_{XY} = \frac{MU_X}{MU_Y} < \frac{P_X}{P_Y} = 2$$

이기에 $\frac{MU_X}{P_X} < \frac{MU_Y}{P_Y}$ 이다.

- 따라서 마가린(Y재)의 구입을 증가시키고 버터(X재)의 구입을 감소시켜야 한다.

19. ④

출제포인트 미시-예산선

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정답

담배가격의 하락으로 담배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가격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곡선상의 이동이 일어난다.

20. ①

출제포인트 미시-가격소비곡선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이 가격소비곡선으로 그 형태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에 따라 다르다. 즉, 탄력적일수록 우하향 형태이고 비탄력적일수록 우상향 형태이며 가격 탄력도가 1일 때 수평이다.

정답

탄력적일수록 가격소비곡선이 우하향 형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약간만 상승하더라도 구입량은 대폭 감소하기에 이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21. ①

출제포인트 미시-균형의 안정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수준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균형은 안정적이다.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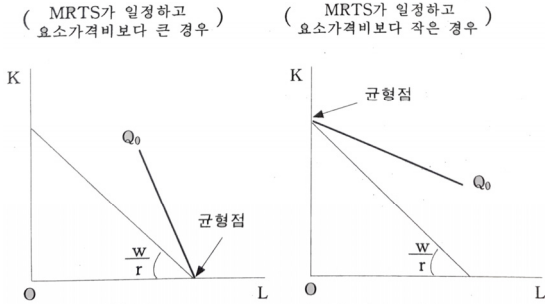
-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에서, $60 - 2P_X = 22.5 - 0.5P_X$, $120 - 4P_X = 45 - P_X$, $3P_X = 75$ 일 때, 균형가격은 $P_X = 25$, 균형수급량은 $Q_X = 10$ 이다.
-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수준, 가령 $P_X = 5$ 에서, 수요량(50)이 공급량(20)을 초과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하기에 가격이 상승하여 균형으로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균형은 안정적이다.

22. ①

출제포인트 미시-생산자균형

등량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 혹은 자본만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다.

정답



한계기술대체율이 일정하므로 등량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임을 의미한다. 등량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 한계기술대체율이 등비용선의 기울기인 $\frac{P_L}{P_K}$ 의 2배가 될 때, 노동만을 이용하여 생산한다.

23. ①

출제포인트 미시-총점극대화

총점이 극대가 되도록 하려면 추가적인 시간투입에 따른 한계점수가 같아지도록 각 과목 공부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정답

- 예상점수45: 1시간씩 경제학과 회계학에 투입
- 예상점수37: 1시간은 재무관리에 투입
- 예상점수20: 1시간은 재무관리에 투입
- 예상점수19: 1시간씩 경제학과 재무관리에 투입
- 예상점수18: 1시간씩 경제학과 재무관리에 투입
- 예상점수17: 1시간은 회계학에 투입
- 예상점수16: 1시간은 회계학에 투입
- 따라서 총점이 극대가 되도록 하려면 경제학에 3시간, 회계학에 3시간, 재무관리에 4시간을 배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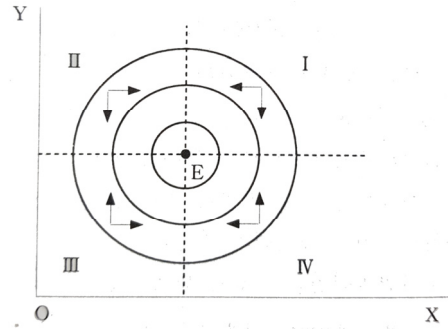
24. ④

출제포인트 미시-무차별곡선

무차별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커지고 교차하지 않으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 E점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포화점)이라 가정한다.
- 영역 III은 일반적인 영역으로 X재와 Y재가 모두 재화의 경우이다.
- 영역 I은 X재와 Y재가 모두 비재화의 경우이다.

- 영역 II에서는 Y재가 비재화인 구간이고, 영역 IV에서는 반대로 X재가 비재화인 구간이다.



정답

한계효용이 (-)인 오염물질(Y재)의 양이 증가할 때 동일한 효용이 유지되려면 한계효용이 (+)인 공산품(X재)의 양이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무차별곡선이 우상향의 형태로 도출된다.

오염물질이 많아질수록 한계비효용이 증가하는 반면 공산품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면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질 때 동일한 효용수준이 유지되려면 공산품의 양이 점점 더 증가해야 한다.

25. ②

출제포인트 국제-IS-LM-BP모형

IS-LM-BP모형에서 대체지급수단의 개발로 '화폐수요 감소 → LM곡선 우측이동 → 이자율하락 → 자본유출 → 외환수요증가'이다.

정답

-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자본유출로 인해 외환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면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IS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국민소득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
-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외환에 대한 수요증가로 환율상승 압력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매각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다시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기에 최초의 균형으로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국민소득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세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④	③	④	③
6	7	8	9	10
④	④	④	④	①
11	12	13	14	15
①	③	④	④	④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③	④
21	22	23	24	25
③	②	②	③	④

1. ③

선지분석

- ①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즉, 다시 공제할 수 없다.
- ②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결손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④

선지분석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 ② 무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기명 채권의 경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한다.
-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3.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4. ④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5. ③

선지분석

- ①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통지를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은 입은 사유로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6. ④

선지분석

- 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 ②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7. ④

선지분석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 또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 ③ 내국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를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8. ④

선지분석

- ① 면세포기신고서는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 ② 면세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하며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문화행사, 야마추어 운동경기에 대해서 면세한다.

9.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10. ①

종합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11. ①

결산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된다.

12. ③

선지분석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 ②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를 성립시기로 한다.

13. ④

선지분석

- ①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제징수를 한다.
- ② 파산한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한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4. ④

한도를 계산할 때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15. ④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6. ④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7. ③

공급받은 자가 받은 판매장려물품은 공급받은 자의 과세표준과 상관없다. 과세표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②

선지분석

-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④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19. ③

선지분석

- ①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비용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④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업자가 주택에 대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20. ④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1. ③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②

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3. ②

유가증권은 임의변경시에 총평균법과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개별법)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24. ③

선지분석

- ①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손금에 해당된다.
- ② 업무무관 자산의 경우에도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5. ④

선지분석

- ①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②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5년으로 한다.
-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한다.

회계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④	②	②	②	②
6	7	8	9	10
④	①	①	①	④
11	12	13	14	15
②	③	④	④	②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④	②
21	22	23	24	25
②	④	③	③	④

- ④
⇒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1,331 - 500 - 121 = 710$
1) 매출: $1,000 \times 1.1^3 = 1,331$
2) 매출원가: $(-)500$
3) 이자비용: $1,000 \times 1.1^2 \times 10\% = (-)121$
- ②
1) 반환재고회수권: $400 \times 100\text{개} \times 15\% - (200 + 300) = 5,500$
- ②
1) 수익: $6,000 - (4,000 - 2,000) = 4,000$
- ②
1) 기말 매출채권: 기초 $1,000 + \text{외상매출 } 5,000 - \text{대손 확정 } 60 - \text{현금회수 } 4,640 = 1,300$
2) 대손충당금 T계정
* 기초 $50 + \text{설정} + \text{대손확정 회수 } 16 = \text{대손확정 } 60 + \text{기말 } 1,300 \times 5\%$, 설정액: 59
-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0 + 1,000 + 2,000 + 2,000 = 7,000$

- ④
1) 만기수령액: $100,000 + 100,000 \times 9\% \times 6/12 = 104,500$
2) 할인액: $104,500 \times 12\% \times 5/12 = 5,225$
3) 현금수령액: $1) - 2) = 99,275$
4) 장부금액: $100,000 + 100,000 \times 9\% \times 1/12 = 100,750$
5) 처분손실: $3) - 4) = (-)1,475$
- 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 ①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된다.
- ①
1) 20X1년 말 손상전상각후원가: $100,000 \times 0.79 + 10,000 \times 1.69 = 95,900$
2) 20X1년 말 손상후상각후원가: $100,000 \times 0.79 = 79,000$
3) 손상차손: $1) - 2) = 16,900$
- ④
⇒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16,000
1) 배당금수익: $500 \times 10\text{주} = 5,000$
2) 처분손실: $(9,000 - 10,000) \times 5\text{주} = (-)5,000$
3) 평가이익: $(13,200 - 10,000) \times 5\text{주} = 16,000$

11. ②

차) 이자비용	1,200	대) 미지급이자	200
선급이자	60	현금(역산)	1,060

12. ③

차) 건물	4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
감가상각비	700	처분이익	100
		현금(역산)	900

13. ④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경우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14. ④

반드시 법적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②

기계장치 취득원가: $15,000 + 100,000 + 20,000 + 20,000 = 155,000$

16. ①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②

1) 취득원가: $1,000,000 + 300,000 + 200,000 = 1,500,000$
2) 20x2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 $\min[1,100,000, 1,500,000 \times 3/5] = 900,000$

18. ①

재평가잉여금: $2,800,000 - (3,000,000 - 3,000,000/10) = 100,000$

19. ④

주식발행초과금: $150,00 - 10\text{주} \times 5,000 = 100,000$

20. ②

차) 임차료	900,000	대) 선급임차료	900,000
차) 공과금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차) 선수수익	200,000	대) 수익	200,000

- 1) 자산: $(-)900,000$
- 2) 부채: $200,000 - 200,000 = 0$
- 3) 비용: $900,000 + 200,000 = 1,100,000$
- 4) 수익: $200,000$

21. ②

제조간접비 예산	₩10,000
(÷) 예정조업도	1,000시간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10
(×) 실제조업도	800시간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8,000
실제 제조간접비	₩8,200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200 과소배부

22. ④

- 1) 꾸러미 공헌이익: $(50-20) \times 1 + (30-10) \times 2 + (20-10) \times 3 = 100$
- 2) 손익분기점 꾸러미 판매량: $4,000/100 = 40\text{개}$
- 3) 제품 Z 손익분기점 매출액: $40\text{개} \times 3 \times 20 = 2,400$

23. ③

$800 = 3,200 \times (\text{생산량} - 300\text{단위}) \div \text{생산량}$,
생산량: 400단위

24. ③

선지분석

- ①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②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신고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④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25. ④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국제정치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①	④	②	③	③
6	7	8	9	10
④	④	④	①	④
11	12	13	14	15
②	③	②	④	③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①	①
21	22	23	24	25
②	④	④	③	①

1. ①

오답체크

- ②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제품생산 지역이 이동한다고 본다.
- ③ 자유주의자의 입장이다.
- ④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2. ④

세력전이론에서의 동맹은 주로 편승동맹이고 동맹의 수명이 길다. 약소국은 국익증진을 위해 패권국에 자발적으로 편승하고, 패권국은 힘의 우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약소국을 포섭하기 때문에 자치안보교환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맺어진 동맹은 결속력과 지속력이 강할 것이다. 반면, 세력균형론에서의 동맹은 주로 균형동맹이며 동맹의 수명이 짧다. 세력균형론에서는 동맹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맺기 때문에 세력균형의 추이에 따라 유연한 동맹형성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동맹의 결속력이나 지속력이 높지 않은 것이다.

3. ②

- ㄴ. 구조의 행위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사회실재론이라고 한다.
- ㄷ. 왈츠(S. Waltz)의 신현실주의의 주장이다. 구성주의에서 구조는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체는 구조를 형성할 뿐 아니라 변화시키는 근본원인이 된다.

4. ③

오답체크

- ㄷ. 무정부에서 위계체제로의 변화를 체제 자체 변화라고 한다. 극성의 변화를 체제 내 변화라고 한다.
- ㄹ. 공격자가 우세하면 연쇄적 패거리 짓기, 방어가 우세하면 책임전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5. ③

오답체크

- ① 허즈는 무정부체제에서 비롯되는 안보딜레마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 ② 메스키타는 국가들이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차원에서 전쟁을 도발한다고 본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공격적 전략은 '전망이론'의 입장이다.
- ④ 손실영역에서 위험선폭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한다고 본다.

6. ④

대외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7. ④

오답체크

- ① 원셋이 확대될수록 협상력은 약화되므로 국제협상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은 낮아진다.
- ② 이면보상이란 자국 내 강경파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자국의 원셋을 '확대'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원셋이 확대되면 자국의 협상력은 약화된다.
- ③ 경성국가의 원셋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점은 옳다. 다만, 연성국가란 시민사회로부터의 자율성이 낮은 국가를 의미한다.

8. ④

집단방위에 대한 설명이다.

9. ①

정치는 '인간성'에 내재한 불변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나머지 모겐소의 현실주의 원칙을 살펴보자면, 다섯째, 정치적 현실주의는 특정 국가의 도덕적 열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 법칙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즉, 일국이 외교정책을 추구할 때 자국의 정책을 세계 보편적 도덕법칙으로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정치적 현실주의는 정책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인과관계를 독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0. ④

중속이론가들과 달리 월러스타인은 중심·반주변·주변 부 상호간 상호 이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한적 현상이며, 국가들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위치로부터 발전·저발전이 규정된다고 본다.

11. ②

구안보조약은 현재의 안보조약과 비교하여 문제가 많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구조약은 기지주둔의 광범위한 권리를 미국에게 부여하였지만, 미국의 일본방위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구조약 제1조는 미국이 주둔 미군을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할 뿐이었다. 이 구조약은 일본만이 의무를 지는 '주둔협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답체크

④ 내란조항이란 내란진압을 위해 미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이다.

12. ③

오답체크

- ① G8은 1998년 버밍햄정상회담부터 러시아가 정식 멤버가 되면서 불리게 된 이름이다. 옵서버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1977년부터 유럽공동체(EC)대표가 옵서버로 참가했으며, 1978년 정식 멤버가 되었다.
- ② G8은 초기의 경제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정치, 외교 분야까지 협의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합의 결과의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④ G20은 G8을 수정·보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자적인 정상회담이다.

13. ②

오답체크

- ㄱ. EU개혁조약 서명 2007.12
- ㄴ. 영국 EU탈퇴 2016.6
- ㄷ. 유로화 공식 통용 2002.2
- ㄹ.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 기관 단일화 1967.7
- ㅁ. EU헌법조약 서명 2004.10

14. ④

북대서양조약은 워싱턴조약이라고도 한다.

15. ③

오답체크

- ① EC는 GATT에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WTO원회원국으로 인정된다.
- ② 중국이 2001년, 러시아가 2011년 가입하였다.
- ④ 총의제가 원칙이다.

16. ④

우리나라는 2004년에 동 추가의정서에 가입하였다.

17. ②

오답체크

- ① 미국 주도하에 구성한다.
- ③ 보장서한 접수 후 3개월 이내가 아닌, 접수 '즉시'이다.
- ④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18. ①

2013년 출범하였다.

19. 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안보리의 수권을 받지 못해 침략 여부에 대한 전 세계적 논쟁을 야기하였다. 미국은 선제적 자위권 및 인도적 간섭권을 원용하여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20. ①

오답체크

- ② 1996년 12월 가입
- ③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의무 부담
- ④ '수원국'의 기관과 제도 체계를 사용한 일관된 원조 수행

21. ②

- ㄱ - 대서양헌장(41.8.12)
- ㄴ - 미드웨이 해전(42.6.5)
- ㄷ - 카이로회담(43.11)
- ㄹ - 노르망디상륙작전(44.6)
- ㅁ - 얄타회담(45.2)

22. ④

로카르노 체제는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프랑스와 동유럽국가들의 안보위협을 제거하여 유럽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체제는 적대관계에 있는 2국 간의 불가침 협정 체제를 주변의 관계국들이 공동으로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다. 이는 영국의 전통적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었는데, 대륙세력과 동맹은 맺지 않고 대륙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을 소외시키지 않고 프랑스의 안보를 보장해 줌으로써 양 세력 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23. ④

오답체크

- ① 루터파만 인정한 회의였다.
- ②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였다.
- ③ 프랑스는 스페인과 대항하여 싸웠다.

24. ③

한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 당사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서명국, 즉 공식 참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25. ①

텐진조약에 기초하여 공동 출병했다.

국제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①	②	③	①	③
6	7	8	9	10
④	③	②	①	①
11	12	13	14	15
②	②	③	①	③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②	②
21	22	23	24	25
③	②	②	③	②

1. ①
청구의 경합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국제법규칙은 부존재한다.

2. ②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은 '임의적 보편관할권'의 성격을 띤다. 즉, 보편관할권은 국가의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다.

3. ③
11인이다.

4. ①
오답체크
ㄷ. 군도수역의 내측은 내수이며, 외측은 영해이다.
ㄹ. 군도수역의 상공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다.
ㄴ. 군도수역에서의 원칙적 통항권은 '무해통항권'이다.

5. ③
오답체크
①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국제기구 내에 존재한다면 이 내부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한다.
④ 국제기구가 직무보호권을 발동한다면 국제기구의 직접피해에 해당하므로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6. ④

오답체크

- ① 선진국의 입장이다.
- ② 행정이사회 의장은 IBRD총재이다.
- ③ 합의 후에는 양 당사자 모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7. ③

몬트리올의정서에 대한 기술이다.

오답체크

- ① 런던뎀핑협약은 해상투기오염을 규제하는 조약이다.
- ② 기술이전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바젤협약 책임배상에 관한 의정서는 유해(有害)폐기물이 국가간에 이동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5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환경관련 협약 가운데 책임배상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8. ②

UN사무총장을 통해 통보한다.

9. ①

해석상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①

국제기구 설립협정도 국가간 체결된 조약이므로 69년 협약의 지배를 받는다.

11. ②

상소기구는 패널보고서에 제기된 법률문제와 패널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따라서 상소대상이 아닌 사실문제 및 패널이 다루지 않은 법률문제는 상소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DSU 제17조 6항)

오답체크

- ① 상소기구는 패널과 달리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된 권위자인 상소기구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소요청시 이중 3인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판결한다. (DSU 제17조 1, 2, 3항)
- ③ 상소는 분쟁당사국만 할 수 있으며 제3국은 상소자격이 없다. 단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고하고 패널절차에 참가한 제3국은 제3자로서 상소에 참여하여 상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DSU 제17조 4항)
- ④ 상소기구는 패널 평결 파기시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원 패널에 사건을 반송하는 '파기 환송권'은 없다.

12. ②

철회할 의무는 없으나,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조정을 권고한다.

13. ③

실효적 지배가 선점의 필수요건인 것은 옳지만, 반드시 국가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 지배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오답체크

- ② 서부사하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권고적 의견사건에서 제시된 것이다.
- ④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 상징적 지배가 인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본토로부터 원격지,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상징적 지배가 인정되었다.

14. ①

주주에 대한 직접피해의 경우 회사의 소멸과 무관하게 주주의 국적국이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15. ③

오답체크

- ① 영국은 미승인국의 국내적 지위에 대해 창설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이 승인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행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승인국 국내법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 ② 집단적 승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이 경우 승인의 효과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16. ③

오답체크

- ① 다자조약의 타 당사국은 조약의 '정지'를 위해 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종료를 위해서는 위반국 이외의 모든 다른 당사국의 동의를 요한다.
- ② 후발적 이행불능은 상대적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종료를 위해 동 사유를 원용하되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후발적 이행불능 역시 목적물의 영구적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17. ①

오답체크

- ② 2년마다 선출한다.
- ③ 47개 회원국으로 구성한다.
- ④ 임기는 3년이다.

18. ④

당사자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19. ②

해양법협약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경우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오답체크

- ①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은 직선기선의 관습법성을 확인한 판례이다.
- ③ 간조노출지에는 원칙적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 위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조노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제4항).
- ④ 통상기선이 원칙적이고, 직선기선이 예외적이다.

20. ②

오답체크

- 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③ 중재합의 기한은 6개월이다.
- ④ 기탁정부들에 통고한다.

21. ③

파리협정의 선진국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22. ②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권한있는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23. ②

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한다.

24. ③

타국이 소송의 당사자로 거명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있어서 그 소송이 그 타국의 재산, 권리, 이익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을 가지는 경우 타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 간주된다[제6조 제2항(b)].

25. ②

국제관습법이 국내법률과 대등하다고 보는 것으로 평가된다.

형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①	④	②	③	②
6	7	8	9	10
①	③	④	③	③
11	12	13	14	15
④	③	③	②	②
16	17	18	19	20
①	①	①	④	④
21	22	23	24	25
④	②	①	②	②

1. ①

선지분석

- ㄱ. (○) 대판 2021.11.25. 2016도3452
- ㄴ. (○)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21.10.28. 2021도7538).
- ㄷ. (×) 강요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대판 2021.11.25. 2018도1346).
- ㄹ. (×)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판 2021.9.30. 2021도6634).

2. ④

- (×)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0.9.24. 79도1387).

선지분석

- ① (○)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판 2002.2.8. 2001도6425).
- ② (○) 대판 1992.2.11. 91도2951
- ③ (○) 대판 1991.10.22. 91도2174

3. ②

- (○) 대판 2006.12.8. 2006도6155

선지분석

- ① (×)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5.10. 90도2102).
- ③ (×)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이 조사한 바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1.7.14. 2011도639).
- ④ (×)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4. ③

- (×)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대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선지분석

- ① (○)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판 2020.12.30. 2015도12933).
- ② (○)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대판 2000.2.11. 99도4579).
- ④ (○) 丙이 甲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甲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甲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대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5. ②

- (○) 대판 2011.4.28. 2011도2170

선지분석

- ①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대판 1976. 4.13. 75도781).
- ③ (×)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은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0.2.11. 2009도12627).

- ④ (×)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인적처벌조각사유는 고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고의에 영향이 없다.

6. ①

-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로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며,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로서 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본다.

선지분석

- ② (×) 다중불해산죄(제116조)나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는 명령규범을 전제로 한 구성요건이다.
- ③ (×)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18조).
- ④ (×)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

7. ③

선지분석

- ㄱ. (×)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대판 1984. 10.10. 82도2595 전합).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형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8.4.12. 2013도6962).

- ㄷ. (x)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10.11. 91도1656).
- ㄹ. (○)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9.24. 2004도4066).

8. ④

선지분석

- ㄱ. (허용 x)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ㄴ. (허용 x)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법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8.3.15. 2017도21656).
- ㄷ. (허용 x)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과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를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21.1.28. 2020도2642).
- ㄹ. (허용 x)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 사실공표죄에서 ‘경력등’이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같은 법 제64조 제5항),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9. ③

- (x)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7.11.28. 97도1740).

선지분석

- ① (○) 대판 2017.12.5. 2016도16738
- ② (○) 대판 2006.10.26. 2004도486
- ④ (○) 대판 2021.11.11. 2021도11547

10. ③

- (○) 대판 1993.9.28. 93도2143

선지분석

- ① (x)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29. 2015도7559).
- ② (x)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에 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흥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에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흥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6.9.14. 2004도6432).

- ④ (×)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0.9.30. 2010도7405).

11. ④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5.2.12. 2014도10086).

선지분석

- ① (○) 피고인의 팔이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 ②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24. 2003도4417).
- ③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

12. ③

-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지 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8.4.10. 2008도1013).

선지분석

- ① (○) 대판 2011.9.29. 2011도6223
- ② (○)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과 기재된 공문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대판 2021.9.16. 2019도18394).
- ④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

13. ③

- (×)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417).

선지분석

- ①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 ② (○) 대판 2021.2.4. 2020도12103
- ④ (○) 뇌물수수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4.27. 2005도4204).

14. ②

- (×)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8.29. 97도675).

선지분석

- ① (○) 대판 2008.2.14. 2005도4202
- ③ (○) 대판 1997.4.22. 95도748
- ④ (○)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판 1997.8.22. 95도984).

15. ②

- (×)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고,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의 사기 피고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진범 乙 등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12.8.30. 2012도6027).

선지분석

- ① (○) 대판 2014.4.10. 2013도12079
- ③ (○) 대판 2008.12.24. 2007도11137
- ④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7. 2005도3707).

16. ①

-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된다.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라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의 문제이다.

선지분석

- ② (○) 대판 2017.4.13. 2017도953
- ③ (○) 대판 2007.12.28. 2007도5204
- ④ (○)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집회·시위 등이 일정한 경우에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판 2020.9.3. 2015도1927).

17. ①

- (○) 대판 2009.1.30. 2008도8607

선지분석

- ② (×)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8.26. 94도780).
- ③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판 2014.5.16. 2012도12867).
- ④ (×) 피고인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7.15. 2008도11679).

18. ①

- (×) 폭탄·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선지분석

- ② (○) 강도음모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43조).
 ③ (○)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乙, 丙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29. 2009도7150).
 ④ (○) 강도에 공할 흉기를 휴대하고 통행인의 출현을 대가하는 행위는 강도예비에 해당된다(대판 1948.8.17. 4281형상80).

19. ④

-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중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8.30. 2012도6027).

선지분석

- ① (○) 대판 2003.4.8. 2003도382
 ② (○)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21.11.25. 2021도10903).
 ③ (○)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 총칙 제32조 소정의 감경 대상이 되는 중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중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6.9.23. 86도1429).

20. ④

- (×)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선지분석

- ① (○) 대판 1982.6.22. 82도705
 ② (○)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11. 2012도1895).
 → 상상적 경합관계가 됨
 ③ (○) 대판 1983.4.26. 83도323

21. ④

- (×)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경우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21.1.14. 2020도14735).

선지분석

- ① (○) 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합
 ② (○) 대판 2015.9.10. 2015도6745
 ③ (○) 대판 2013.4.11. 2012도15890

22. ②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1.21. 91도1170).

선지분석

- ① (○) 대판 2006.3.23. 2005도4455
 ③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

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5.11.10. 2005도 6604).

- ④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3.11.28. 2003도4257).

23. ①

- (×)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07도1397).

선지분석

- ② (○)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1994).
- ③ (○)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7.28. 2009도14928).
- ④ (○)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甲이 관련사건의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가, 그 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甲이 위 관련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甲의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되어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 진술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9.30. 2010도7525).

24. ②

-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74조). → 개정 <시행일 2021. 12.9>

선지분석

- ① (○) 형법 제72조 제1항
③ (○) 형법 제73조의2 제1항
④ (○) 형법 제73조 제1항

25. ②

선지분석

- ㄱ.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모든 착오가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고의가 부정된다.
- ㄴ.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오인함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 ㄷ. (×)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 ㄹ.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甲에게 책임이 부정될 뿐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乙에게 교사범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④	②	②	④	②, ④
6	7	8	9	10
③	②	②	①	①
11	12	13	14	15
④	①	③	③	③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②	④
21	22	23	24	25
④	③	④	③	④

1. ④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한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

선지분석

-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8.10.23. 2008도7362 안산 노래방 사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②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분석

- ① 고소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형식의 제한이 없다.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②

선지분석

- ①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며, 피의자신문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신문 중이라도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④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이라면 진술거부권 고지하여야 한다.

4. ④

선지분석

- ① 체포당시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검사 역시 긴급체포서 작성해야 한다.
③ 체포의 긴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5. ②, ④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상대적 친고죄로,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甲은 누나의 고소가 있기 전까지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6. ③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및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기간은 법원의 구금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선지분석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3차 갱신이 가능하며, 위 신청권자에서 검사는 제외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7. ②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선지분석

- 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ㄷ.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하다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8. ②

보석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면 된다.

9. ①

간호사는 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혈액의 소지자, 소유자, 보관자 중 1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호사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선지분석

- ② 별건압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을 중지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범행현장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10. ①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선지분석

- ㄴ. 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ㄹ. 재정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11. ④

선지분석

-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② 구속영장에 구인의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구인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 ③ 48시간이 아닌 24시간이다.

12. ①

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에 관여한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③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이 관할법원이 된다.

14. ③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방식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15.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로 법정구속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구속 피고인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사건을 말한다.

16. ②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 및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주어 져야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다.

선지분석

- ①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이 난 경우,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진행함이 원칙이다.

17. ③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후 증거능력을 추인하면(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 증거능력을 부여받는다.

선지분석

- ② 필요적 공범관계(대항범 등)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신문이 불가능하나, 필요적 공범관계인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아니다.

18. ②

조서에 이의의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조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선지분석

- ④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본증으로 사용될 수 없다.

19. ②

소년의 연령을 오인하거나, 성년의 연령을 오인하여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이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선지분석

- ④ 피고인이 원판결 선고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시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으며, 만일 피고인이 원판결 선고 전 이미 사망하였고 이를 알고 있으나 간과하고 판결선고에 나아간 것이라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20. ④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족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물건 소지자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21. ④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당해법관에게 한다.

선지분석

- ② 기피신청을 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간이기각 결정할 수 있다.

22. ③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경찰관이 직접 소재탐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아 송달불능보고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④

참고인이 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4. ③

옳은 것은 ㄱ, ㄴ, 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이다.
ㄷ. [x] 해당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으로, 그러한 문자메시지는 요증사실인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5. ④

옳은 것은 ㄱ, 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ㄱ. [○] 독수독과이론으로 체포가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로 보아야 한다.
ㄴ. [x]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까지 압수의 대상에 포함된다.
ㄷ. [x] 대화당사자의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교육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②	②	①	②
6	7	8	9	10
②	①	③	③	②
11	12	13	14	15
④	③	④	③	④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②	①
21	22	23	24	25
④	②	④	①	②

- ③
파이너(Pinar)에 의해 제기된 재개념주의는 타일러(Tyler)에 의해 확립된 교육과정 연구의 방법을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currere'의 명사 개념에서 학습자 개인의 삶의 해석을 강조하는 동사형, 즉 "달린다."라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 ②
루터의 교육사상은 무상의무교육이다. 그는 기독교적 이상과 인문주의를 결합해서 내적신앙과 지적이고 이성적인 지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가정의 연장으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교회가 아니라 세속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서지오바니(Sergiovanni)는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을 기술적 지도성, 인간적 지도성, 교육적 지도성, 상징적 지도성, 문화적 지도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교육적 지도성에서 학교장은 일선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선지분석
①은 인간적 지도성, ③은 기술적 지도성, ④는 문화적 지도성에서의 학교장의 역할을 말한다.

- ①
매슬로우(Maslow)의 결핍욕구는 하위욕구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으로는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이론, 알더퍼(Alderfer)의 생존과 관계욕구,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의 인간관,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의 인간관 등이 있다.
- ②
의사결정이란 행동 노선에 영향을 주는 모든 판단을 말한다. 즉 의사결정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의사결정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결정의 양은 많아지고, 집행은 적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 ②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진리결정을 위한 대화와 논의를 중시하며, 탈정형화, 탈정전화를 추구한다.
선지분석
② 이성적, 합리적, 객관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존중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 ①
비고츠키의 언어발달설에서 자기중심적 언어, 즉 혼잣말의 사용은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 ③
작업기억은 장기기억 속에 보관되어 있던 정보가 활성화되어 되돌아오는 기억체계를 말한다. 작업기억에서는 정교화나 자동화 등의 정보처리작업이 일어난다.
선지분석
①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선택적 지각을 통해 단기 기억구조로 들어가는 것은 감각등록기이다.
② 단기기억에서 정보의 양을 확장하는 작업은 청킹(chunking)이다.
④ 시연과 부호화는 단기기억의 작용이다.
- ③
심성계명설(心性啓明說)이란 교육을 마음의 눈을 떠주게 하는 일이라고 보는 교육관을 말한다. 즉 교육을 통해 지식이나 규범이나 원리를 획득하는 일은 자연과 인간사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교육관을 심성계명설이라고 한다.

10. ②

퇴계 이황은 전 생애를 통한 학문의 태도로 거경(居敬)을 중시하였고, 율곡 이이는 학문의 자세로 입지(立志)를 강조하였다.

11. ④

상담기법 중 공감적 이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이 되어 내담자를 이해하는 지적인 태도이다.

12. ③

공인(共因)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란 한 행동특성을 잴 검사 X와 이 검사 밖에 있는 동질적 행동준거 Y와의 일치도로, 검사 X를 검사 Y로 대체할 수 있느냐고 할 때 공인 타당도가 된다. 공인 타당도는 새로운 검사를 제작하였을 때 기존에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에 의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13. ④

문해교육 가운데 기능문해교육은 기초문해교육을 기초로 개인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활동 능력을 연결시키는 교육을 말하며 최근에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평생을 통한 계속학습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14. ③

근대 공교육제도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다양한 지위 집단들의 기득권 수호 혹은 합법적인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한 경쟁의 수단으로 제도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지위경쟁이론(혹은 계층경쟁이론)이다.

15. ④

사회적 지위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귀속주의(혹은 후원주의)이고, 반면 사회적 지위가 개인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업적주의 혹은 능력주의라고 한다.

16. ②

교육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통합보다는 분과가 유리하다.

17. ②

실행연구란 특정한 학교나 학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기 위해 설계, 실시되는 응용연구의 한 형태를 말한다.

선지분석

① 현재 상황에서 한 변인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상관연구이다.

③ 한 변인을 조작해서 다른 변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해서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실험연구이다.

④ 문제행동의 진단이나 치료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인의 생활사,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사례연구이다.

18. ④

사회의 가치와 규범 및 생활양식의 전달자인 사회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이다.

19. ②

아무리 발달된 교수매체도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20. ①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에서는 도덕적 딜레마의 제시를 통해 언어적 진술을 분석한 결과, 문화와 사회에 관계없이 도덕적 성숙은 3수준과 6단계라는 불변의 계열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21. ④

이 내용은 1895년 고종이 공포한 교육입국조서이다. 교육입국조서 이후 다양한 학교들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통변학교는 입국조서 공포 이전인 1883년 멜렌도르프의 도움으로 설립된 통역관 양성학교였다.

22. ②

탐구학습이란 학습자들이 지식의 획득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연이나 사회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탐구능력을 기르고, 인식의 기초가 되는 개념의 형성, 새로운 것의 발견, 탐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려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선지분석

① 학생이 사전에 온라인 등으로 학습내용을 공부해 온 후 학교 수업에서는 문제해결이나 토론 등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수업 형태는 플립러닝이다.

③ 학생들이 지식의 획득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이나 사회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인식의 기초가 되는 개념의 형성을 돕는 수업형태는 탐구학습이다.

④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원리로 모형 제시하기(modeling), 안내하기(coaching), 발판제공하기(scaffolding)를 제공하기 전에 학습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형태는 구성주의 수업설계모형으로 조나센에 의해 제시되었다.

23. ④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결정권을 분권화시켜 시·도단위 혹은 단위학
교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①

지방장학(교육청 장학)의 유형 가운데 종합장학은 국가
시책, 교육청 시책을 비롯하여 중점업무 추진상황, 교수
-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적
으로 지도·조언하는 장학을 말한다.

25. ②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은 교
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것이다.

교정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①	①	④	④
6	7	8	9	10
①	③	④	③	④
11	12	13	14	15
③	④	④	④	④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④	③
21	22	23	24	25
③	②	③	④	②

1. ③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이란 '차후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사회와 구성원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지문은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에 대한 설명이다.

선지분석

- ① 집합적 무능력화는 모든 강력범죄자를 장기간 구금하여 '교정비용의 증가' 및 과밀수용의 문제를 야기하며, 그 대안으로 선별적 무능력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다.
- ② 중·누범자들이 구금된 빈자리를 다른 범죄자들이 대신하는 경우에는 범죄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는 단점이 지적된다.
- ④ 소수의 중·누범자들이 대부분의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는 전제에서 이들을 장기간 구금하여 범죄의 감소를 추구하는 방안이다.

2. ①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교도관직무규칙」 제12조 단서).

제12조 【수용자에 대한 호칭】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

선지분석

- ② 「교도관직무규칙」 제8조

③ 「교도관직무규칙」 제41조 제3항

제41조 【접견 참여 등】 ③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수용자의 처우나 그 밖의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교도관이 아닌 교도관은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도관직무규칙」 제14조 제1항

제14조 【수용자의 손도장 증명】 ①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한다. 다만, 수용자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고, 그 손도장 옆에 어느 손가락인지를 기록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문서 작성 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3. ①

'교정보부장'은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법 제117조의2 제1항 참조).

법 제117조의2 【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분석

② 법 제117조의2 제2항

법 제117조의2 【정보공개청구】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17조의2 제3항

법 제117조의2 【정보공개청구】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법 제117조의2 제4항

법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5. ④

- ㉠ 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 법 제5조의2 제2항 제5호
- ㉢ 법 제5조의2 제2항 제8호
- ㉣ 법 제5조의2 제2항 제9호

법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①

ㄱ, ㄴ, ㄷ.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9가지 명제).

정리 서덜랜드(Sutherland)의 범죄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9가지 명제)

- ㉠ 범죄행동은 학습된다.
- ㉡ 범죄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 ㉢ 범죄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집단 안에서 일어난다.
- ㉣ 범죄학습 내용은 범죄기술 외에 범죄동기·충동·합리화 방법·태도 등을 포함한다.
- ㉤ 범죄동기·충동의 구체적 방향은 법규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정의로부터 정해진다.
- ㉥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 위반에 대한 긍정적 정의가 부정적 정의를 압도하기 때문이다(차별적 접촉).
- ㉦ 차별적 접촉은 빈도·기간·순위·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 ㉧ 범죄자와 접촉을 통해 범죄를 배우는 과정은 다른 모든 행위의 학습과정과 같다.
- ㉨ 범죄행동은 사회의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지분석

ㄴ. ‘범죄행동은 사회의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금전적 욕구나 좌절 등 범죄의 욕구와 가치관이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를 구별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

7. ③

㉠, ㉡, ㉢ 영 제24조

영 제24조【호송 시 분리】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선지분석

㉣ 외국인수용자와 내국인수용자는 호송 시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8. ④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4호).

법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9. ③

밀러(W. Miller)의 하위계층문화이론(하층계급문화이론)에서는 하층계급의 범죄 및 일탈에 대해 중류계층의 규범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소속된 해당 문화에 충실한 행위일 뿐이라고 본다. 지문의 내용은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주장이다.

선지분석

- ① 낙인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일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낙인에 의해 선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다(귀속과 낙인의 산물).
- ②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은 “우리는 모두 동물이고 따라서 범죄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보아,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관심을 두며, 개인적 통제보다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여 사회유대의 약화를 비행의 원인으로 보아 사회유대의 요소로서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을 들고 그 중 애착을 가장 중요시한다.
- ④ 사회해체이론은 범죄의 발생을 전통적 사회조직의 붕괴로 인한 규범의식의 변화, 사회통제력의 약화 및 반사회적 행위의 보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10. ④

적절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법 제52조 제1항).

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

선지분석

① 법 제50조 제2항

법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법 제41조 제3항 제1호

법 제41조【접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53조 제1항

법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 양육불허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야야 한다.

11. ③

「소년법」 제63조

선지분석

-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이 규정은 행위 시에 18세 미만이었으나 과형 당시에 성인이 된 때에도 적용한다.
- ②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대적 부정기형)(「소년법」 제60조 제1항).
- ④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 부정기형의 장기)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소년법」 제66조).

12. ④

규칙 제96조 제1항 참조

규칙 제96조 【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선지분석

- ①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일반·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능하다(규칙 제88조 단서 참조).

규칙 제88조 【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 완화·일반·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봉사원 선정의 대상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이며, 선정에 있어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한다(규칙 제85조 제1항·제4항 참조).

규칙 제85조 【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사회견학, 사회봉사 등의 사회적 처우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2조 제1항 참조).

규칙 제92조 【사회적 처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견학
2. 사회봉사
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13. ④

- ㄱ. 형벌은 위하작용에 의해 일반 국민의 범죄를 예방하고(일반예방, 초범예방), 범죄인의 개선효과(특별예방, 재범예방)도 거둘 수 있다.
- ㄴ. 그룹워크(Group Work)란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서 초범예방대책에 속한다.
- ㄷ. 소셜워크(Social Work, 전문기술적용 개선법)란 대상 범죄자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범죄자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재범예방대책에 속한다.
- ㄹ. 지역사회회 조직화는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이지만 재범예방대책으로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ㅁ. 임상적 개선법이란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생물학적·정신의학적·심리학적 이상·결함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으로서 재범예방대책에 속한다.
- ㅂ. 매스컴은 대중에게 범죄문제를 자세히 알리며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초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14. ④

법 제76조 제1항 참조

법 제76조 【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①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선지분석

- ①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영 제89조 참조).

영 제89조 【작업의 종류】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② 면제한다(법 제72조 제1항 참조).

법 제72조 【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70조 참조).

법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외부통근작업), 제69조 제2항의 훈련(→ 외부직업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④

일수벌금제도란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먼저 정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개선된 벌금형제도이다. 일수벌금제도는 행위자의 경제상태 내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개별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6. ④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영 제111조).

영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사】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선지분석

- ① 법 제89조 제2항

법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② 규칙 제150조 제3항

규칙 제150조【구분수용 등】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③ 영 제109조

영 제109조【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17. ③

- 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유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의 선고유예의 실효(失効)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 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2조【유치】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ㄷ.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선지분석

- ㄴ.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제3항).

제43조【유치기간】 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② 법원은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 ③

- ㄱ.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수용자 또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0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 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ㄷ.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선지분석

ㄷ. 법 제101조 제1항 제4호

법 제101조 【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19.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선지분석

- 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③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하한’을 2배로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생략)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 ③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0. ③

다시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법 제114조 제2항).

법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 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선지분석

- ① 법 제115조 제1항
- ② 규칙 제234조 제1항 1호 라목 및 4호

규칙 제234조【징벌의 실효】 ① 법 제115조 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지: 2년 6개월
 -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지: 2년
 -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지: 1년 6개월
 - 라. 9일 이하의 금지: 1년
4. 제2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외의 징벌: 1년

- ④ 규칙 제230조 제1항

규칙 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지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지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21. ③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5조【수용자의 처우】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移送)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분석

- 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④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22. ②

사회봉사명령(3호)과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은 병합할 수 없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참조).

선지분석

- ①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 ③ 「소년법」 제33조 제3항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③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소년법」 제33조 제1항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자 등 위탁·시설 등 위탁·병원 등 위탁)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23. ③

법 제77조 제2항 제1호

법 제77조【귀휴】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선지분석

- ① '6개월' 이상 복역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형자가 대상이다(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법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 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②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일반귀휴의 대상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129조 제2항 단서).

규칙 제129조 【귀휴 허가】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규칙 제143조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④

‘14세’ 미만의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선지분석

-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5. ②

전자감시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동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②	③	③	④	①
6	7	8	9	10
③	②	①	②	④
11	12	13	14	15
④	②	③	③	②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②	④
21	22	23	24	25
②	①	②	①	③

1. ②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 하는 자'는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선지분석

-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은 정의규정과 입법목적 등 개념이 다르다.
③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2호
④ 임원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대판 2003.9.26, 2002다64681).

2. ③
근로시간(제50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나머지 문항은 모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3. ③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은 시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시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기간 중에 시용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21.4.29, 2018두43958).

선지분석

- ① 대판 1993.9.24, 93누4199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징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
④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8.9.13, 2017다16778). 즉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근로자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4. ④

선지분석

- 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5.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긴급이행명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관련한 간접강제 내용이다.

선지분석

- ②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신설(2021.11.19. 시행)
③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6. ③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게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대판 1988.12.13, 87다카2803).

선지분석

-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상여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훈인, 사망 등)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7. ②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 12시간,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51조 및 제51조의 2).

선지분석

-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일정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주나 특정한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부에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소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부, 연소자 모두에게 적용이 불가하다.

8. 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선지분석

- ②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④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②

- ①② 사용자는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도 사용촉진대상이 된다(제61조 제2항 신설).

선지분석

- ③ 사용촉진제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된다.
- ④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10.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2.12.22, 91다45165).

선지분석

- ①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②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위원들이 퇴직금 규정의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였고도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대판 1994.6.24, 92다28556).
- ③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77.7.26, 77다355). 한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는 한 반대한 개별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은 있다.

11. ④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2항)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한편,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음에 유의할 것.

12.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5조).

선지분석

-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 ③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임검, 심문, 검진(의사), 기타 사법경찰관의 직무이다.
- ④ 근로기준법 제103조

13. ③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해당한다(대판 2010.3. 25, 2007두8881).

선지분석

- ①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개정 시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2021.7.6. 시행) 이제 해고자 등 취업관계 없는 자도 기업별 노조가입이 허용된다.

14. ③

판례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선지분석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4조의2 제1항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4조의2 제5항
-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4조의2 제2항

15. ②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9조의4 제2항).

선지분석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9조의4 제1항
-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은 없다.
- ④ 대판 2018.8.30, 2017다218642

16.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46호 제1항). 직장폐쇄는 정당성 요건으로서의 대항성이 요구된다.

선지분석

- ② 대판 2016.5.24, 2012다85335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44조 제1항
-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41조 제1항

17. ④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60조 제5항).

선지분석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53조 제1항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77조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57조 제1항

18.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86조

선지분석

-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82조 제1항), 근로자 및 노동조합 모두 독자적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 ② 3월 이내에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82조 제2항).
- ③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85조 제1항).

19. ②

②는 적용제외 대상자이며, ①은 감액적용 대상자이다(단순노무업무 제외).

20. ④

재심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분석

- 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씩 구성한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21.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신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며, 신고의무사항은 아니다.

22. 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선지분석

- ② 직접 고용간주가 아니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③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4항).

23. ②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2008.7.10, 2007두298).

선지분석

-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24.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선지분석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1항
- ④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25. ③

사업주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

선지분석

- ①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 ② 근로기준법 제51조
- ④ 근로기준법 제52조 제4항

관세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④	③	①	②	①
6	7	8	9	10
③	④	③	①	④
11	12	13	14	15
④	④	②	④	②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③	④
21	22	23	24	25
①	④	①	①	①

1. ④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93조 제4호).

2. ③
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 결, 3, 환'이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 ①
화물관리인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선지분석

- ② 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3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 ③ 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 ④ 법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제5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4.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5. ①

관세부과가 '유예된 때'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6. ③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영 제6조 제4호). 이것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된 설명이다.

선지분석

- ① 영 제7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② 영 제7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④ 영 제7조 제2항 제3의3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7. ④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영 제66조 제4항).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8. ③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9. ①

세관공무원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④

‘미, 벌, 통’은 운영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에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1. ④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 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입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12.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64조 제6항).

선지분석

- ①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2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②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3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③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4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13. ②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

14.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수입신고수리전 물품 반출과 관련된 표현이다(법 제252조).

선지분석

- ① 영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제2항 제1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② 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3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③ 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항 제3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15. ②

작업 허가를 받아 공장외작업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187조 제5항).

선지분석

- ① 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4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③ 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6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④ 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7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16. ③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61조 제5항).

선지분석

- ① 영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1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② 영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3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④ 영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1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17. ①

'판매'를 '사용'으로 바꿔야 한다.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체가 직접 사용하여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여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18. ②

(다)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라)를 범인으로부터 '추징'으로 바꿔야 한다.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나) 범칙 당시의 (다)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라)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19. ③

제시된 규정(법 제24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77조 제4항 제2호).

20. ④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③ 영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21.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선지분석

- ② 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2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③ 영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항 제1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④ 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5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22. ④

밀줄 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일반적인 감면 물품이 아니라, ‘감면 승계’시의 감면 물품만을 말한다.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②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2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법 제149조 제3항).

선지분석

- ② 법 제27조(가격신고) 제3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③ 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④ 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24. ①

관세포탈의 고의가 인정이 되면 관세포탈죄로 처벌된다.

25. ①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관세법 제324조(포상)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경영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②	③	③	①	②
6	7	8	9	10
②	②	②	④	③
11	12	13	14	15
①	④	①	④	④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③	③
21	22	23	24	25
③	①	②	④	③

- ②
②는 유형의 재화(goods)에 대한 설명이며, 나머지는 무형의 서비스(service)에 대한 설명이다.
- ③
통제의 폭이 일정하다고 할 때, 수평적 분화가 클수록,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조직의 부서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을수록 조직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 ③
③은 사업부제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 ①
①은 GE Matrix에 대한 설명이다.
선지분석
②③④ BCG Matrix에 대한 설명이다.
- ②
하이더(Heider)는 특정인(P), 타인(O), 특정대상(X)이 상호 간에 가지는 태도관계를 요소들 간의 삼각관계로 설명하였다. 즉 각 관계(PO, OX, PX)를 각각 +와 -로 분류하고 그 곱이 +의 값을 가지면 균형상태로 구분하고 -의 값을 가지면 불균형상태로 구분한다. 그리고 불균형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인은 균형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더(Heider)는 태도변화 원인을 태도변화자의 외부에서 설명하였다.

- ②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요인은 인간의 만족과 불만족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위생요인이 충족되면 직무에 대한 불만이 감소하지만, 동기부여가 유발되지는 않는다.
- ②
토마스(Thomas)는 갈등관리전략 중 회피전략은 직면한 문제들을 피하고자 하는 전략이고, 자신과 상대방의 공통된 관심분야를 서로 주고받는 전략은 타협전략이다.
- ②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 명확한 과업분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단계로 강력한 관료화를 지향하는 단계는 공동체단계이다.
- ④
선지분석
① 외부모집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가진 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
② 다수의 면접자가 다수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집단면접이다.
③ 여러 상황에서도 똑같은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일관성을 신뢰도라고 한다.
- ③
강제할당법은 피평가자 집단의 성과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미리 몇 개의 범위와 평가요소에 따라 피평가자들을 평가하여 범위 또는 등급별로 피평가자들을 강제로 할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관대화경향, 중심화경향, 가혹화경향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나 평가집단이 전체적으로 우수하거나 열등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 ①
인적자원의 경력관리를 통해 해당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입 및 직무만족도는 높아진다.
- ④
노사관계는 생산과정에서는 노사가 서로 협조하여 생산성 증대를 이루어야 하지만, 생산의 성과를 배분할 때는 서로 많이 가지려고 대립하는 관계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13. ①

작업공간의 자재운반거리가 짧고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속도가 빠른 것은 제품별 배치의 장점이다.

14. ④

재고를 다량으로 보유할 경우 자금 경색을 악화시킬 수 있다.

15. ④

선지분석

- ①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다.
- ② 불량으로 인한 폐기 및 재작업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는 것은 경영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고를 최소로 유지한다.
- ③ 일관되게 높은 품질과 예방적 유지보수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무결점(완전한 품질)을 강조한다.

16. ②

채찍효과(bullwhip effect)는 정확한 수요예측, 공급사슬 구성요소들 간의 정보공유, 리드타임(lead time)의 감소 등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17. ③

서열척도는 순위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하는데, 숫자의 크기로 서열을 매기게 된다. 등간척도는 속성에 대하여 숫자로 순위를 부여하되 숫자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를 의미한다.

18. ④

선지분석

- ① 물리적인 제품을 통해서 충족되는 소비자의 궁극적 필요와 욕구를 핵심제품(core product)이라고 한다.
- ② 소비자들은 편의품으로 갈수록 제품을 구입할 때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
- ③ 소비자가 한 제품범주에 속한 특정 상표를 재인(recognition)하거나 회상(recall)하는 능력은 브랜드 인지도이다.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의미한다.

19. ③

프리미엄(premium)은 사은품을 의미한다.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소비자들이 시험 삼아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따로 포장하여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견본품에 대한 설명이다.

20. ③

A와 E는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HMS)에 대한 설명이고, B, C, D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MS)에 대한 설명이다.

21. ③

기업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자와 달리 배당은 세금감면효과가 없다.

22. ①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유동비율을 증가시키는 활동은 유동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유동부채를 감소시키면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 중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미수금은 유동자산에 해당하고, 선수금은 유동부채에 해당한다.

23. ②

이자비용과 배당금은 실제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자본예산에서는 이자비용과 배당금을 현금유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명백한 현금유출이지만 투자안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때 분모에 할인율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현금흐름에 반영할 경우 이중으로 반영하는 결과가 되므로 현금유출로 처리하면 안된다.

24. ④

옵션매입을 long position이라고 하고, 옵션매도를 short position이라고 한다.

25. ③

기초자본액은 기말자본에서 자본증가액을 차감한 값이다. 여기서 자본증가액은 '총수익-총비용+추가출자'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값은 450,000원이다. 따라서 기초자본액은 750,000원이 된다.